

ISSUE & FOCUS

Newsletter 2016-6(2)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의 합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김정은 시대를 위한 ‘제7차 당대회’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지속되었던 북한 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가 폐막됐다. 이번 당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였던 만큼 역대 어느 대회보다 많은 3,667명(결의권 대표자 3,467명, 발언권 대표자 2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외견상 성대함을 과시했다. 당대회가 북한 최고의 정치활동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대회 개최 자체가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당대회는 ‘노동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수정’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전략을 결정’하고 ‘핵심지도층을 선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회는 북한 최고의 정치적 활동 공간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투표는 찬성과 박수 그리고 함성만이 난무했지만 ‘투표’라는 행위를 거쳤다는 점에서 처리된 모든 안건은 정당화된다.

북한은 6차례 당대회 개최를 통해 지도이념이나 당의 노선을 제시했다. 즉 ‘6·25 전쟁’ 이전에 개최된 ‘제1·2차 당대회’는 뚜렷한 지도이념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1956년 개최된 ‘제3차 당대회’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추가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의 지도이념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70년 ‘제5차 당대회’의 지도이념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채택되면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핵심이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대를 이은 주체사상’의 기반을 다져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역대 당대회는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하거나 공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당대회 개최는 큰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직후 “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36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은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 5년차 김정은은 당대회 개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자원낭비가 예견되는 소모성 행사인 당대회를 강행한 이유는 김정은 자신을 위한 ‘대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김일성이 ‘제4차 당대회’에서 ‘항일무장 투쟁정신’으로 유일지배체제의 기반을 다진 것처럼 ‘제7차 당대회’를 통해 2차례의 핵실험 성과로 김정은 시대의 공식적 개막을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70일 전투’와 백두산발전소 준공을 독려했고, 당대회 개최사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하고자 했다.

2. ‘제7차 당대회’ 에 숨은 의미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규정하면서, 집권 5년 동안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제시하고 ‘핵·경제발전병진정책’을 당의 노선임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생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상투적 수법을 반복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동안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을 완성한 것이 당(黨)사업의 성과이며, 동 성과를 계승발전해 가기 위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핵비확산·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조국통일 3대원장’(김일성의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기반으로 ‘조국통일’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제시했다. 하지만 5개년 전략은 구체적 내용이 없고 대강의 전략목표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전략임이 분명하다. 또한 대화와 평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대남평화공세를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관계 악화

의 원인이 한국에 전가시키고자 하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일전선에서 북한은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의 통일노선인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다의적 목표를 가지고 ‘제7차 당대회’를 준비했다. 우선 대내적 목표는 매우 형식적이지만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대관식의 통과의례를 완료함으로써 3대 세습 독재권력을 공식화하는 공간으로 당대회를 활용했고, 세대교체 -당중앙위원회 위원 교체- 를 통해 권력실무그룹을 친위세력으로 충당함으로써 권력의 장기적 안정기반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실히 하여 대외관계 -특히 미국- 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남관계에서는 ‘핵을 앞세운 통일대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한편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셀프 대관식’이었던 ‘제7차 당대회’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67년 전 김일성의 직위였던 당위원장 직위를 복구함으로써 김일성의 후광(後光)을 업고 3대 세습을 정당화하였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김정은의 선행(先核)정치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군중노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구호로서의 경제’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7차 당대회’는 선행 후경(先核後經)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950년대의 군중노선을 강조한 점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착취가 일상화되고 있어 문제이다.

3.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과제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분명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무시한 일방통행적 행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퇴행적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그렇고, 민생을 외면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야욕을 보인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의 모습은 절망적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즉 기존의 ‘대화를 통한 북한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198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을 선택한 역사적 경험이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준다. 체제전환국이 체제전환이라는 근원적 변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①극심한 경제위기 - 통치자금 부족 ②외부정보유입 ③종교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 ④지도층 및 주민 간의 극심한 소득격차 등이다. 이러한 계기(요소)는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창구를 봉쇄하고 이를 지속해 가는 것이다.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지난 3월 발효됐다. 그리고 이행보고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김정은의 자금줄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정당성과 제재확산의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효과가 재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지속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제재의 감사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을 방지할 외교적 수단과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다음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에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370만대의 휴대전화와 기 구축된 북한 내 인터넷도 활용해야 한다. 이들을 정보환류체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북한으로 외부정보 유입 → 유입된 외부정보의 북한 내 순환 → 북한 내 순환된 정보의 외부유출 등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보환류체계의 구축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시켜 주는 계기로 작동하고, 종국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기반구축과 북한민주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현재 DMZ에서 외부정보유입은 한계가 있다. 한편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심리전 방송들과 뼈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내부로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창구 봉쇄는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정보환류체계 구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를 활용하고 정보유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지도자의 결기와 결단, 국민의 인내와 지혜가 요구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